

이달의 초점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4개국 인식 조사 결과 분석

독일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권영지·주보혜|

일본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최경덕|

스웨덴과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신영규·남윤재|

프랑스와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프랑스와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¹⁾

Perception Survey on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in Four Countries: The Case of France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 글에서는 프랑스와 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여 양국의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프랑스는 출산 및 자녀 양육에서 건강, 주거,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은 경제적 여건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은 '자유 의 제한'과 '일할 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가 더 컸는데,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수준과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도 프랑스보다 낮게 나타났다. 프랑스는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고, 정부의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높은 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정책의 설계와 추진에서 사회구조적 여건 개선과 사회 신뢰 회복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1 들어가며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적인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라는 급격한 인구 변화를 겪었다. 특히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저출산 현상과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구조적 고착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제로 인식되며 정부 차원에서의 체계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2006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인구정책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 왔다. 현재 제4차 기본계

1) 이 글은 이소영, 최인선, 이지혜, 손동기, 김영아. (2024).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5장 내용을 보완 및 재구성한 것이다.

획(2021~2025)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5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다양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이 도입되고 있으나,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정책 효과성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외의 인구정책을 벤치마킹하려는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 추진된 정책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책이 형성되고 시행되게 된 사회적·문화적·제도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정책 적용의 적합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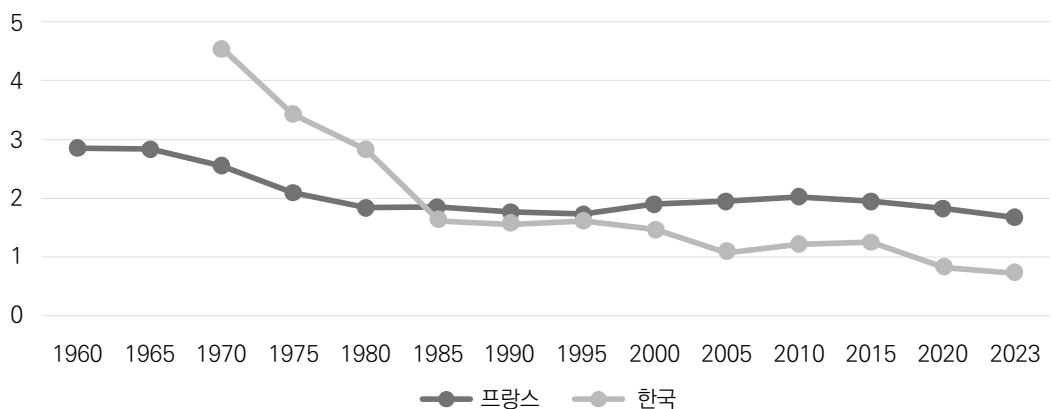
프랑스는 대표적인 저출산 대응 성공 국가로 평가받는다. 프랑스는 1920년대 말부터 출산율 감소 문제에 직면하였고, 이후 1960~1970년대 합계출산율이 급감했지만, 2006년부터는 출산율 2.0명

수준을 유지해 왔다(INSEE, 2025). 2016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소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 1.66명으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주요 선진국 중 높은 출산율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INSEE, 2025; World Bank DATA, 2025).

프랑스 정부는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인구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의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여 2024년 1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인구 재무장(Réarmement Démographique)’ 구상을 발표하며 출생률 제고를 국가적 과제로 천명하고 여러 정책을 마련하였다. 대표적으로 아동 양육과 관련된 직간접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가족수당, 연금 보험료 지원, 가족계수(quotient familial)

[그림 1] 프랑스와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출처: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각 연도, 저자 작성.;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OECD members”, World Bank DATA, 2025.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locations=OE>

를 통한 소득세 경감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수당은 대부분 소득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일정 소득 이상의 가구는 일부 수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다자녀가구에 대한 이사 지원금, 교통비 할인 혜택, 개인 맞춤형 주거 지원, 가족주거수당 등 주거 분야의 다양한 지원책도 운영 중이다. 출산과 양육을 위한 각종 휴가제도(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입양휴가, 육아휴직)와 보육 지원(단일서비스수당, 보육 선택 보조금, 세액공제)도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임신과 출산 관련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전액 보장되며, 난임 예방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난임 검사도 시행되고 있다(이소영 외, 2024).

이러한 배경에서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 프랑스인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동일한 문항을 적용하여 한국 거주 동일 연령대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병행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구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프랑스와 한국인의 결혼, 출산, 육아에 대한 인식 차이를 고찰하고, 향후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프랑스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개요

프랑스의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는 2024년 7월 현재 프랑스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49세 이하 성인 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프랑스인의 결혼, 출산, 육아, 인구변화 및 인구정책과 관련된 인식 및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표본 설계는 프랑스 국가통계청(INSEE)에서 제공하는 최신 인구통계를 기반으로 지역, 성별, 연령을 기준으로 한 비례 할당 방식(stratified quota sampling)을 적용하였으며, 해외 전문 조사기관에 등록된 온라인 패널 중 무작위로 응답자를 추출하였다. 한국 조사 역시 동일한 표본 설계 및 추출 방식을 적용하여 국내 전문 조사기관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였다.

인식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온라인 및 전화 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현지 조사는 외부 전문 조사업체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 기간은 2024년 7월 16일부터 7월 29일까지로, 총 14일간 진행되었다. 조사의 주요 문항은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및 의향, 성역할에 대한 태도, 가사 노동 및 자녀 양육 부담에 대한 인식, 인구문제 및 사회에 대한 전반적 인식,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등이다. 영역별 주요 내용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프랑스 조사 응답자의 일반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응답자 성별은 여성 50.4%, 남성 49.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전체의 3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체로 성별, 연령 간 고른 분포를 보였다.

[표 1]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조사’ 영역별 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 특성	- 성별 - 연령 - 지역 - 학력 - 동거 중인 파트너, 애인, 배우자 유무, 혼인 상태 - 자녀 유무, 자녀 수 - 경제활동 상태 - 가구소득, 경제적 생활수준 인식
결혼 및 출산, 성역할에 대한 인식	- 결혼 의향 - 출산 의향 및 계획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 가족계획(출산) 시 고려 요인 -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 - 일과 가사, 육아에 대한 성역할 인식
가사 및 자녀 육아 부담에 대한 인식	- (실제/적절한) 가사 부담 비율 - (실제/적절한) 육아 부담 비율 -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인구 변화 및 사회에 대한 인식	- 인구 변화에 관한 인식 - 사회의 불평등에 관한 인식
인구정책 및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 자녀 출산 및 양육 관련 예산 투입에 대한 인식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자 작성.

[표 2] 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단위: %, 명)

구분		프랑스	한국
성별	남성	49.6 (1,240)	51.6 (1,291)
	여성	50.4 (1,260)	48.4 (1,209)
연령	20대(20~29세)	31.2 (779)	29.8 (744)
	30대(30~39세)	33.8 (846)	32.2 (804)
	40대(40~49세)	35.0 (875)	38.1 (952)
동거 파트너, 애인, 배우자 유무	있음	62.1 (1,552)	57.2 (1,430)
	없음	37.9 (948)	42.8 (1,070)

[표 2] 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계속)

(단위: %, 명)

구분		프랑스	한국
자녀 유무	있음	52.2 (1,305)	36.3 (907)
	없음	47.8 (1,195)	63.7 (1,593)
취업 여부	취업	81.4 (2,035)	76.8 (1,920)
	비취업	18.6 (465)	23.2 (58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3 결혼·출산·육아에 관한 인식 비교

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법륜혼 상태가 아닌 프랑스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결혼 의향을 조사한 결과(표 1)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38.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결혼할 생각이 없다’ 35.5%,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16.8%, ‘생각해 본 적 없다’ 9.5%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미혼 및 비혼 응답자 중 결혼 의

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9%로, 프랑스보다 14.7%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프랑스에서는 시민연대계약(PACs: Pacte civil de solidarité)과 같이 법적 효력을 지닌 대안적 결합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혼 외의 삶의 방식을 선택지로 고려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자녀 출산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표 4) 프랑스 전체 응답자의 46.7%는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출산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8.8%,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

[표 3] 향후 결혼 의향

(단위: %, 명)

구분	결혼할 생각이 있다	결혼할 생각이 없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전체
프랑스	38.2	35.5	9.5	16.8	100.0 (1,771)
한국	52.9	24.2	5.4	17.6	100.0 (1,383)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26.

[표 4] 향후 출산 의향

(단위: %, 명)

구분	낳을 생각이다	낳지 않을 생각이다	생각해 본 적 없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모르겠다)	전체
프랑스	38.8	46.7	5.0	9.5	100.0 (2,500)
한국	31.2	47.3	5.9	15.6	100.0 (2,50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28.

은 9.5%로 나타났다. 즉 출산 의향이 없는 응답자가 출산 의향이 있는 응답자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출산에 대한 기피 또는 유보적 태도가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 준다. 한국과 프랑스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프랑스 응답자의 출산 의향이 한국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차이는 7.6%포인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프랑스에서 자녀 출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에서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6.1%포인트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 응답자들이 자녀 출산 여부에 대해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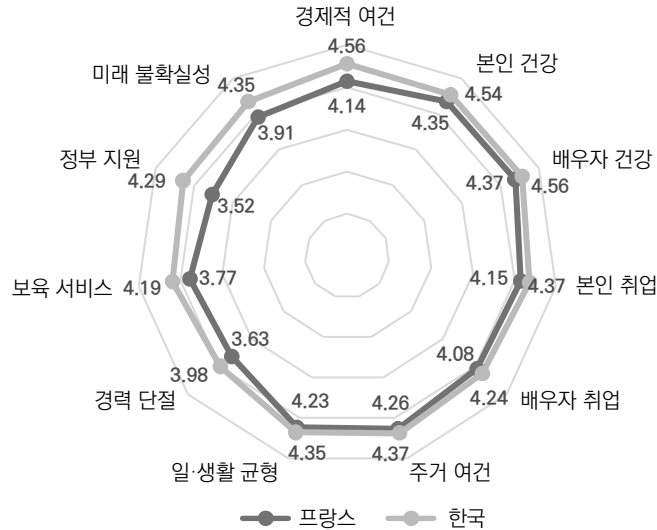
자녀 출산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다양한 요인의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정의 경제적 여건, 본인의 건강, 배우자의 건강, 본인의 취업 상태, 배우자의 취업 상태, 주거, 일·생활 균형, 경력 단절의 가능성,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정부의 충분한 지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 및 불확실성 등 자녀 출산 결정 시 고려되는 11가지 요인들에

대해 프랑스와 한국의 성인 응답자들이 인식하는 중요도를 5점 척도(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매우 중요하다)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프랑스 응답자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높은 중요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적 여건의 경우 프랑스는 평균 4.14점인 반면 한국은 4.68점으로 0.54점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자녀 출산 시 경제적 안정이 필수적 고려 요소로 작용함을 시사하며, 한국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짐을 보여 준다.

본인 건강과 배우자 건강은 한국에서 보다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프랑스에서도 높은 수준의 중요도를 보였다. 개인의 취업 상태와 배우자의 취업 상태 또한 한국(각각 4.37점, 4.24점)이 프랑스(4.15점, 4.08점)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일·생활 균형 또한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높은 평균값(4.35점 vs. 4.23점)을 기록하였고, 경력 단절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서도 한국이 3.98점으로 프랑스(3.6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노동시장의

[그림 2] 가족(자녀 출산)계획 시 고려 요인에 대한 중요도

(단위: 점)



주: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동의한다, 5=전적으로 동의한다.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만한 항목은 보육 및 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한국 4.19점 vs. 프랑스 3.77점)과 정부의 충분한 지원(한국 4.29점 vs. 프랑스 3.52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한국 4.35점 vs. 프랑스 3.91점)으로, 이 세 항목은 양국 간 차이가 가장 컸다.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자녀 수를 조사한 결과 프랑스는 평균 2.1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조건에서 한국 응답자의 평균 계획 자녀 수인 1.74명보다 높아 프랑스 응답자가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녀 수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표 5] 계획 자녀 수 및 이상적 자녀 수

(단위: %, 명)

구분	계획 자녀 수		이상적 자녀 수	
프랑스	2.11	(970)	1.95	(2,500)
한국	1.74	(780)	1.58	(2,500)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일반적으로 자녀는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 평균은 프랑스가 1.95명, 한국이 1.58명으로 조사되었다. 프랑스가 한국보다 0.37명 높은 수준이었다.

자녀 출산 계획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갖게 될 경우 삶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유의 제한성'에 대해서는 프랑스 전체 응답자의 66.8%가 동의하였는데, 한국보다 18.6%포인트 낮았다. '삶의 만족도 향상'에 대한 동의율은 67.9%로, 한국보다 6.4%포인트 낮은 수준이었다. '일할 기회 축소'에 대한 동의율은

44.8%로 한국보다 17.2%포인트 낮았다. '배우자의 일할 기회 축소'에 대해서는 40.4%가 동의하여 한국 대비 11.0%포인트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노년기 보살핌과 안정감 증가'에 대한 동의율은 46.6%로 한국보다 11.8%포인트 높았으며, '배우자와의 친밀감 증가'에 대한 동의율은 37.3%로 한국보다 15.4%포인트 낮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해 동의한 비율은 75.5%로, 한국보다 17.2%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녀 출산으로 인한 삶의 변화에 대한 기대를 7개 항목 구분하여 5점 척도(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

[표 6]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	프랑스	5.0	8.3	20.0	40.9	25.9	100.0 (2,500)
	한국	0.5	2.4	11.8	48.0	37.4	100.0 (2,500)
삶에서 얻는 기쁨과 만족이 커진다	프랑스	3.3	6.2	22.6	36.6	31.3	100.0 (2,500)
	한국	1.0	3.1	21.6	45.7	28.6	100.0 (2,500)
나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프랑스	6.6	15.8	32.8	29.2	15.6	100.0 (2,500)
	한국	2.3	10.8	24.9	39.5	22.5	100.0 (2,500)
배우자의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프랑스	9.8	18.7	31.0	27.0	13.4	100.0 (2,500)
	한국	4.8	15.8	28.0	37.1	14.3	100.0 (2,500)
노년기에 받을 수 있는 보살핌과 안정감이 커진다	프랑스	4.0	10.5	38.9	32.0	14.6	100.0 (2,500)
	한국	7.6	20.8	36.8	26.8	8.0	100.0 (2,500)
배우자와의 친밀감이 높아진다	프랑스	9.0	20.2	33.4	23.6	13.7	100.0 (2,500)
	한국	3.1	8.7	35.5	39.8	12.9	100.0 (2,500)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	프랑스	2.5	4.3	17.7	39.9	35.6	100.0 (2,500)
	한국	0.3	0.6	6.4	32.8	59.9	100.0 (2,50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다, 5점=전적으로 동의한다)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전반적으로 프랑스 응답자는 모든 항목에서 한국 응답자보다 낮은 수준의 영향을 예상하고 있었다. '자유의 가능성 축소'에 대한 인식은 프랑스가 3.74점, 한국이 4.19점으로 0.45점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적 부담 증가'에 대해서는 프랑스 4.02점, 한국 4.51점으로 가장 큰 차이(0.49점)가 나타났다. '기쁨과 만족 증가'(프랑스 3.87점 vs. 한국 3.98점)와 '본인의 일할 기회 축소'(프랑스 3.31점 vs. 한국 3.69점), '파트너의 일할 기회 축소'(프랑스 3.16점 vs. 한국 3.40점) 항목에서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파트너와의 친밀감 증가'에 대한 기대는 한국(3.51점)이 프랑스(3.13점)보다 높았다. 반면 '노년기 돌봄 증가' 기

대는 프랑스가 한국보다 높게 나타났다(프랑스 3.43점 vs. 한국 3.07점).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이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본인과 배우자(또는 애인, 파트너) 간의 가사 및 자녀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실제 가사 분담을 50:50으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프랑스에서 36.7%로 나타나, 한국(23.7%)보다 13.0%포인트 높았다. 반면 적절하다고 인식하는 가사 분담 비율로 50:50을 선택한 응답자는 프랑스가 47.0%, 한국이 43.4%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림 3] 자녀 출산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점)



주: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동의한다, 5=전적으로 동의한다.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표 7] 가사·육아의 실제 및 적절 부담 비율

(단위: %, 명)

구분	가사				육아			
	실제		적절		실제		적절	
	프랑스	한국	프랑스	한국	프랑스	한국	프랑스	한국
본인 50% 미만(0~40%)	17.1	30.8	14.1	24.9	15.9	40.1	14.4	33.1
본인 50%, 상대 50%	36.7	23.7	47.0	43.4	39.1	14.9	48.3	37.4
본인 50% 초과(60~100%)	46.2	45.5	38.9	31.6	44.9	45.0	37.3	29.4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이 100.0%가 안 될 수 있음.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50:50의 가사 분담에 대해 적절한 분담과 실제 분담 간의 차이는 프랑스에서 10.3%포인트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19.7%포인트)의 절반 수준에 해당한다. 실제 육아 부담 비율을 조사한 결과 프랑스 응답자의 39.1%가 50:50으로 분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한국(14.9%)보다 24.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적절한 육아 부담 비율에 대해 ‘50:50’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프랑스 48.3%, 한국 37.4%로, 프랑스가 10.9%포인트 높았다. 50:50의 육아 분담에 대해 적절한 분담과 실제 분담 간의 격차는 프랑스가 9.2%포인트, 한국이

22.5%포인트로 나타나, 프랑스에서 이상과 현실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응답자들이 일과 가사 및 육아를 병행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 즉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프랑스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7.3%가 ‘어렵다’(‘어려운 편이다’+‘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한국 응답자의 비율(57.6%)보다 10.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프랑스가 한국에 비해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을 상대적으로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체계적이고 촘촘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효

[표 8] 일과 가사 및 육아 병행의 어려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어려운 편이다	매우 어렵다	전체
프랑스	5.2	18.9	28.5	38.9	8.4	100.0 (1,552)
한국	2.5	12.3	27.6	43.5	14.1	100.0 (1,43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281.

과를 시사한다. 프랑스는 출산 전후 휴가(Congé prénatal 및 Congé postnatal)를 포함한 출산휴가(Congé de maternité), 배우자 출산휴가 및 자녀돌봄휴가(Congé de paternité et d'accueil de l'enfant), 입양휴가(Congé d'adoption), 육아휴직(Congé parental d'éducation)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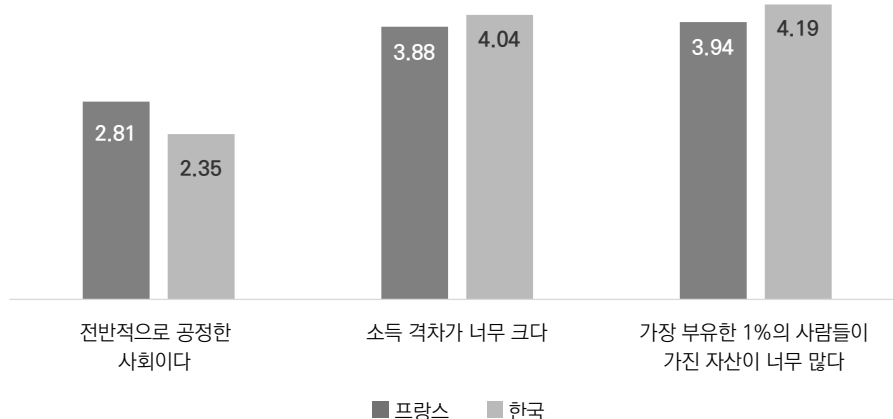
다. 사회에 대한 인식

사회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사회의 공정성과 불평등에 대한 의견을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프랑스 응답자들이 한국 응답자보다 전반적으로

사회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평균 2.81점, 한국이 2.35점으로, 프랑스가 공정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인식을 보였다. 반면 '소득 격차가 너무 크다'는 항목에서는 한국이 4.04점, 프랑스가 3.88점으로 나타났고,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진 자산이 너무 많다'는 항목에서도 한국(4.19점)이 프랑스(3.94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동의를 보였다. 이는 프랑스보다 한국에서 사회 불평등과 자산 집중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남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회에 대한 인식은 개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결혼, 출산과 같은 삶의 주요 결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사회의 공정성과 불평등 인식에 대한 평균 점수

(단위: 점)



주: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동의한다, 5=전적으로 동의한다.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라. 인구변화(출산율 감소)에 관한 인식

한국의 출산율 감소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프랑스의 최근의 출산율 감소는 프랑스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프랑스와 한국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먼저 ‘최근 출산율은 적당한 수준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프랑스는 평균 3.14점으로 ‘보통’에 가까운 반응을 보인 반면 한국은 1.86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동의도를 나타내어 한국의 현재 출산율 감소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출산율 감소가 ‘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한국이 3.07점, 프랑스가 2.79점으로 한국이 다소 높았다. ‘미래세대에 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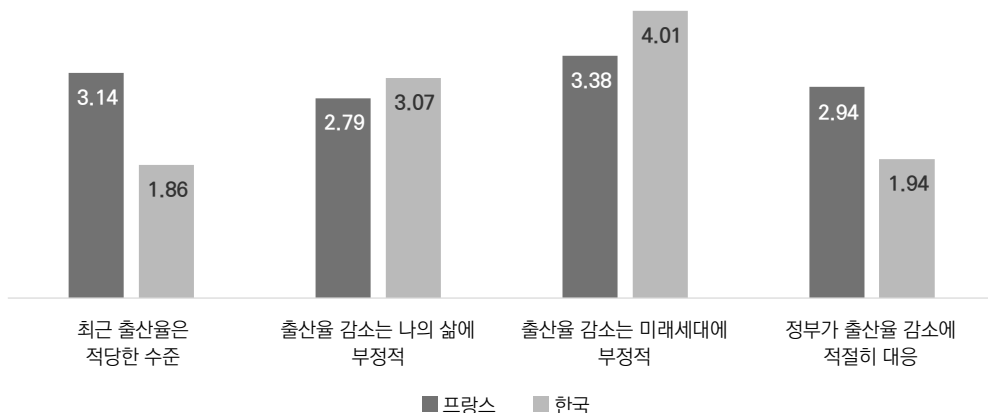
적 영향을 미친다’는 항목에서는 한국이 4.01점으로 프랑스(3.38점)보다 뚜렷하게 높은 인식을 보였다. 반면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2.94점, 한국이 1.94점으로, 프랑스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이러한 인식 조사 결과는 한국에서 출산율 저하에 대한 위기의식이 더 강하며, 동시에 정부의 대응에 대한 불신 역시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마.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프랑스의 다양한 인구정책에 대한 국민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정책에서 프랑스 응답자가 한국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 수준을

[그림 5] 인구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점)



주: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동의한다, 5=전적으로 동의한다.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보였다. 먼저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프랑스에서 76.3%로 나타나 한국(70.4%)보다 5.9%포인트 높았다. 출산수당 및 출산용품 지급 정책의 경우 프랑스(69.6%)가 한국(72.3%)보다 소폭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나, 출산 및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프랑스가 84.4%로, 한국(79.9%)보다 4.5%포인트 높았다. 보육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프랑스 70.1%, 한국 69.0%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자녀 수당 정책에 대해서는 프랑스 응답자의 82.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한

국(72.0%)보다 10.8%포인트 높았다. 조세 혜택과 관련된 정책의 인지도는 프랑스가 74.1%로, 한국(56.2%)보다 17.9%포인트 높은 차이를 보였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정책 역시 프랑스(76.1%)가 한국(69.4%)보다 6.7%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매우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은 7.9%포인트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프랑스에서 61.7%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한국(41.9%)보다 19.8%포인트 높은 수치로, 프랑스 국민이 인구 관련 정책 전반에

[표 9] 인구정책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모른다	거의 모른다	조금 안다	상당히 안다	매우 잘 안다	전체
임신, 출산 지원(의료보험 등)	프랑스	10.2	13.5	36.8	28.0	11.5	100.0 (2,500)
	한국	6.9	22.8	49.2	18.0	3.2	100.0 (2,500)
출산수당 또는 물품 지급(출산장려금 등)	프랑스	11.8	18.5	35.2	24.1	10.3	100.0 (2,500)
	한국	6.9	20.8	47.1	20.8	4.4	100.0 (2,500)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프랑스	5.7	9.9	38.4	32.0	14.0	100.0 (2,500)
	한국	4.4	15.6	49.2	25.1	5.6	100.0 (2,500)
어린이집 지원(보육시설 확충, 보육료 지원 등)	프랑스	10.6	19.3	36.8	23.7	9.6	100.0 (2,500)
	한국	7.8	23.2	44.6	20.6	3.8	100.0 (2,500)
자녀에 대한 수당 (아동수당, 가족수당 등)	프랑스	6.2	11.0	37.2	30.4	15.2	100.0 (2,500)
	한국	7.2	20.9	42.3	24.3	5.4	100.0 (2,500)
세금을 통한 지원(세금 경감)	프랑스	10.1	15.8	35.4	27.0	11.7	100.0 (2,500)
	한국	10.9	32.9	39.0	15.0	2.2	100.0 (2,500)
다자녀가구 추가 지원	프랑스	9.9	14.0	35.9	27.8	12.4	100.0 (2,500)
	한국	8.1	22.4	43.9	21.0	4.5	100.0 (2,500)
지역 인구 균형을 위한 정책	프랑스	19.7	18.6	32.5	19.4	9.8	100.0 (2,500)
	한국	19.6	38.4	30.0	9.7	2.2	100.0 (2,50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자료.

[표 10] 정부의 출산율 감소 대응 노력의 충분성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동의한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체
프랑스	12.1	18.6	41.4	19.1	8.8	100.0 (2,500)
한국	43.5	28.2	20.6	6.3	1.4	100.0 (2,50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18.

대해 더 높은 인식 수준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인구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노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는 문항에 대해 프랑스 응답자의 27.9%가 동의(‘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동일 문항에 대해 동의한 한국 응답자 비율(7.7%)보다 20.2%포인트 높은 수치로, 프랑스인이 정부의 인구정책의 추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

수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프랑스 응답자의 61.1%가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대폭 늘려야 한다’+‘조금 늘려야 한다’). 이는 한국 응답자의 79.3%에 비해 18.2%포인트 낮은 수치로, 프랑스에 비해 한국에서 정부 재정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반면 예산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프랑스가 30.9%로 한국(15.3%)보다 15.6%포인트 높았다. 이는 프랑스에서는 현재 수준의 정책 투입에 대한 수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한

[표 11] 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정부 예산 투입 방향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늘려야 한다	관련 예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관련 예산을 조금 줄여야 한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전체
프랑스	25.9	35.2	30.9	4.6	3.4	100.0 (2,500)
한국	51.7	27.6	15.3	3.2	2.2	100.0 (2,500)

주: 항목별 수치(비율)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음.
출처: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이소영 외, 202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335.

국 응답자들은 예산의 추가 투입을 통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의 출산 결정 요인,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 인구변화 및 정부의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을 비교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출산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5점 척도 분석 결과 프랑스에서는 배우자의 건강(4.37점), 본인의 건강(4.35점), 주거 환경(4.26점), 일·생활 균형(4.23점)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경제적 요인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반면 한국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4.56점)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되었고, 그 외 본인과 배우자의 건강, 주거, 취업 상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프랑스에 비해 한국에서 출산을 결정할 때 경제적 여건이 더 강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보여 주며, 한국 사회의 불안정한 일자리와 주거 상황이 결혼 및 출산의 핵심적인 장애 요인임을 시사한다.

둘째, 자녀가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경제적 부담 증가'를 가장 큰 요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국인은 이 외에도 '자유 의 제한'과 '일할 기회 축소'에 대한 우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출산이 개인의 삶

에 미치는 제약적 영향이 한국에서 더 크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사회에 대한 인식에서는 프랑스인이 한국인보다 전반적으로 사회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프랑스인은 사회적 신뢰와 공정성에 대해 한국인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다. 하지만 출산율 감소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한국인은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더 크게 인식하며, 정부에 대한 불신 수준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넷째,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에서 프랑스인은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낮았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낮아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재정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동의하였다. 즉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훨씬 더 소수만이 정부가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재정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 조사의 결과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인구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국민에 대한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혼인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주거, 양육 환경에 대한 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이소영, 최인선, 이지혜, 손동기, 김영아. (2024). **프랑스의 인구정책 사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통계청. (각 연도). 인구동향조사.
- INSEE. (2025). *Bilan démographique 2024*.
<https://www.insee.fr/fr/statistiques/8313951?sommaire=8313983>
- World Bank DATA. (2025).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OECD members*.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locations=OE>

Perception Survey on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in Four Countries: The Case of France

Lee, Soyoung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is article compares perceptions among French and Korean adults regarding marriage, childbirth, and childcare, and analyzes how these two groups differ in their views on population issues. The French gave greater weight to health, housing, and work-life balance in deciding whether to have and raise children, while for Koreans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economic conditions. Koreans were more widely concerned that childbirth would lead to constraints on freedom and reduced work opportunities. Trust in society at large was higher in France, as was the prevalence of positive perceptions of government responses to population issues. Public awareness of population policies was generally higher among the French than among Koreans. The percentage of those supporting increased government spending on related policies was also higher in France than in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pulation policies should be accompanied by improvements in structural social conditions and strengthened social trust.